

# 중국의 미얀마 코캉사태 대응전략: 북한 급변사태에 주는 시사점\*

신 상 진\*\*

- I. 문제제기
- II. 미얀마 코캉사태 발생 배경과 경과
- III. 미얀마 코캉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
- IV. 북한 급변사태에 주는 시사점
- V. 결론

## 국문요약

이 글은 북한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미얀마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예상대응을 분석·전망하였다. 2009년 8월 3만 7천명에 달하는 미얀마 코캉지역 주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유입되었을 때, 중국정부는 위급하고 광범위한 대응을 요구하는 1급 돌발사태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처했다. 중국 내에 유입된 미얀마인들을 임시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여 수용한 다음 사태가 진정된 후 곧바로 미얀마로 귀환시켰다.

대량 탈북자 유입 시 중국은 북한사태가 중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며, 한·미에게 북한사태 개입 명분을 주지 않고 주변국에게 중국위협 인식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단독 군사개입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코캉사태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태 시 중국의

대응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로 간주하고 국무원 차원을 넘어 당 중앙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사태로 인해 중국과 한·미가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중뿐 아니라 한·미간에도 북한사태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충돌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중 간 협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미 동맹정책에 대한 중국의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중국, 미얀마, 코캉사태, 북한 급변사태, 위기관리, 탈북자

\* 이 논문은 2009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광운대학교 국제협력학부 교수

## I. 문제제기

중국은 14개 국가와 2만 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접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로써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변경지역의 안정유지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부여하고 있다. 개혁·개방시기 이전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保家衛國)아래 한반도에서 유엔군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고, 인도, 소련 및 베트남과 대규모 전쟁을 불사함으로써 변경지역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처럼 중국이 주변국과 무리한 전쟁을 감행한 이유는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접경지역에 위협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변경지역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고 주변지역의 불안정사태가 자국의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무력수단까지 동원했던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중국은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02년 16차 당대회와 2003년 10기 전국인대를 거치면서 구축된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 역시 주변국 외교를 중시하면서 ‘선린, 안린, 부린’ 정책을 채택·추진해 왔다. 주변지역 국가와 정치·외교적 신뢰를 강화하고,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며, 주변국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2007년 17차 당대회 보고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제기한 ‘조화세계’(和諧世界) 구축 구상도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 형성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2050년까지 현대화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중국은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유지하는데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의 지전략가들은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를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4개 핵심 주변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sup>1</sup> 동북아 지역의 핵심 불안정 요인으로 북한 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들고 있고, 동남아지역 긴장요인으로는 베트남과의 갈등과 미얀마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안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지역패권 갈등과 아프간전쟁을 남아시아지역 불안정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sup>1</sup> 張小明, 『中國周邊安全環境分析』(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3), pp. 88-148; 朱聽昌, 『中國周邊安全環境與安全戰略』(北京: 時事出版社, 2002), pp. 28-45; 林利民, “世界地緣政治新變局與中國的戰略選擇,” 『現代國際關係』, 2010年 第4期, pp. 7-8; 孫祥華, “中國與周邊國家關係的新發展,” 『國際問題研究』, 2010年 第3期, pp. 1-7.

상기 4개 중국의 주변 전략지역 중 동북아의 북한문제와 동남아의 미얀마문제는 중국에게 매우 유사한 안보 불안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와 북한은 각기 중국과 1,300 마일과 1,300 킬로미터가 넘는 긴 국경선을 마주하여 중국의 안보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되어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존을 추구해 온 국가이다. 또한 이들 두 나라는 군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나라이며,<sup>2</sup>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로부터 이들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미얀마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두 접경국가에서 발생하게 될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도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글은 2009년 8월 미얀마 코캉지역 주민의 대량 중국유입 사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량 탈북자 유입 시 중국의 예상 대응을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 II. 미얀마 코캉사태 발생 배경과 경과

### 1. 코캉사태 발생 배경

미얀마는 1948년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국가이며, 1988년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나라다. 군사정부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듬해 곧바로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개칭했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인 2005년에는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를 양곤(랑군)에서 내륙지역의 네이피도(Naypyidaw)로 천도했다.<sup>3</sup> 탄수웨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의장이 이끄는 미얀마 군사정부는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여사의 전국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의석 80%를

<sup>2</sup> 그러나 2010년 11월 총선 실시 이후 탄수웨 미얀마 국가평화발전위원회 의장은 2011년 3월 30일 국가평화발전위원회(군사정부) 폐지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총선에서 승리한 테인세인이 곧바로 미얀마 대통령에 취임하고 민정을 출범시켰다. “緬甸新總統呼吁加強民族團結,” <<http://www.huanqiu.com/roll/2011-03/1599759.html>> (검색일: 2011.3.31); Lex Rieffel, “Is This a Meaningful Milestone for Myanmar/Burma?”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11/0405\\_myanmar\\_burma\\_rieffel.aspx](http://www.brookings.edu/opinions/2011/0405_myanmar_burma_rieffel.aspx)> (검색일: 2011.4.15).

<sup>3</sup> Lowell Dittmer, “Burma Vs. Myanmar: What’s in a Name?” *Asian Survey*, Vol. XLVIII, No. 6 (November/December 2008), pp. 885-888.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권이양을 거부하고 야당의 활동을 불허하면서 20년 넘게 군부 독재정치를 지속해 왔다.<sup>4</sup>

군사정권의 민주세력 탄압정책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결국 미얀마는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미얀마 군사정부는 동북부지역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외교적 지지와 경제사회적 지원에 의지해야 했고,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집단 거주하는 중국계 소수민족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무장력을 보유하도록 용인해야만 했다. 해방 직전에 개최된 1947년 팡룽(Panglong)회의 당시부터 민족통합 차원에서 자치권이 부여되어 왔는데, 미얀마 동북부지역에서 중국의 지원 하에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던 코강족, 와족, 산족, 커친족 등 4개 중국계 소수민족에게 계속 자치특구가 허용되어 왔다.<sup>5</sup> 1989년 미얀마 공산당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중단된 뒤 미얀마 군사정부는 과거 코강지역 소수민족 무장세력 지도자와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이 지역을 산주(Shan 州) 제1특구로 인정해 주었다. 특구지역에서는 독자적 군 병력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미얀마 군사정부와 중국계 소수민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sup>6</sup>

그런데 2008년 5월 미얀마 군사정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을 개정했다. 미얀마 정부군(Tatmadaw)이 미얀마 국방을 책임지는 유일한 군대라고 규정하고 지방 소수민족 특구 지도자에게 무장을 해제하도록 명령했다. 신헌법 338조 규정에 의거, 소수민족이 보유했던 무장세력은 미얀마 정부군에 편입되어 변경지역 경비를 담당하도록 강요받게 되었다. 또한 이들에게는 정당을 결성하여 2010년 11월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당근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일부 소규모 소수민족 무장세력은 미얀마 군사정부의 이러한 갑작스런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국 원난성과의 접경지역에 기지를 두고 있는 와족, 카

<sup>4</sup> 양길현, 『버마 그리고 미얀마』 (서울: 오름, 2009), pp. 118-126.

<sup>5</sup> 黃康顯, “對果敢局勢可有所作為,” 『大公報』, 2009.9.8. 미얀마 독립과 함께 변경지역 소수민족에게 자치권을 허용하기로 한 팡룽회의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Matthew J. Walton, “Ethnicity, Conflict, and History in Burma,” *Asian Survey*, Vol. XLVIII, No. 6 (November/December), pp. 889-910 참고.

<sup>6</sup> 중국은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무장세력과의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미얀마 정부군으로 하여금 소수민족 무장세력과 휴전협정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국과 1,300 마일에 이르는 국경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소수민족들은 미얀마 군사정부와 17개의 휴전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휴전 대가로 이들은 자치권과 무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받아왔다. 羅聖榮·汪愛平, “緬甸果敢衝突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2009年 第12期, pp. 22-26.

렌족, 커친족 등 17개의 비교적 세력이 큰 소수민족 무장세력은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결국 2009년 코캉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끊임없이 미얀마 정부군과 소수민족 무장세력 간에 크고 작은 마찰과 무력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코캉특구 지역에도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코캉특구를 미얀마 자치현으로 개편하며, 50세 이상의 군인은 모두 퇴역시키고, 미얀마와 중국 국경지대 통행로를 모두 정부가 통제하며, 군사편제를 국방부 통제 하의 변경보안부대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201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내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대세력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고,<sup>7</sup> 비교적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코캉지역 소수민족 무장세력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독자적 군사력을 가지고 특구지역을 관할하면서 미얀마와 중국 국경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마약 거래와 인신매매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왔던 코캉 소수민족 무장세력도 당연히 미얀마 정부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강력하게 반대했다.<sup>8</sup>

## 2. 코캉사태 경과

코캉 소수민족 무장세력이 정부의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입장을 밝히자, 2009년 8월 7일 미얀마 군사정부는 마약제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30여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코캉 특구지역의 무기 수리공장을 수색하려 했다. 이에 코캉 소수민족 무장세력이 접근을 거부하자, 다음 날에는 군대까지 파견하여 강제적으로 수색을 실시함으로써 미얀마 경찰·정부군과 코캉 동맹군 사이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그러나 양측의 자제로 인해 대치국면이 무력충돌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후 8월 14일 탄수웨 미얀마 군사정부 최고지도자가 짐 웹 미 상원의원을 초청하여 회견을 개최한 뒤, 산주(Shan 州) 경찰이 코캉지역 무장세력 지도자 평가

<sup>7</sup> 또한 미얀마 군사정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반체제인사인 수지 여사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기 위해 신헌법에 대통령 후보자의 부모와 배우자는 외국인이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이미 작고한 수지 여사의 남편이 영국인이라는 점을 겨냥했던 것이다.

<sup>8</sup> 羅聖榮, 汪愛平, “緬甸果敢衝突及其影響,” p. 23; 祝湘輝, “緬甸果敢已經不能平靜,” 『世界知識』, 2009年 第18期, p. 29; “Ceasefire Groups in Shan State face renewed pressure to surrender,” *Mizzima News*, September 4, 2009; Thomas Fuller, “Ethnic groups in Myanmar hope for peace, but gird for fight,” *The New York Times*, May 11, 2009.

성(彭家聲) 형제를 소환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8월 23일 100여명의 미안마 정부군이 평자성 거소를 습격하고, 다음날인 24일 미안마 군과 경찰은 특구 무장세력에게 반정부 동맹군에서 탈퇴하여 미안마 정부군 변경방어부대로 편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수민족 무장세력이 정부군의 요구를 거절하자 8월 25일 1,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군 병력을 투입하여 코강특구를 점령하고 소수민족 무장세력 지도자 평자성과 그의 지지자를 체포하려 했다. 월등한 무기와 장비를 갖춘 미안마 정부군에 의해 코강특구지역 소수민족 무장세력은 이렇다할만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제압당했다.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생명의 위협과 재산상의 피해를 느끼게 된 수만 명의 특구지역 주민이 중국 윈난성 난산진 통행로를 통해 피난길에 올랐다. 피난길에 나선 대부분의 난민들은 중국계 주민들과 변경지역에서 중국과 변경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었다.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이전 코강특구지역은 중국계 화인에 의해 통치되었고 중국계가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안마 정부군에 의해 점령된 뒤 위기감을 느낀 변경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피난민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약 37,000명의 난민이 중국 윈난성으로 진입하였으며, 이 외에 코강 무장병력 700명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다.

### Ⅲ. 미안마 코강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

근대화 이전까지 코강지역은 한족이 봉건 통치를 하면서 청조에 충성을 맹세한 중국의 세력범위 내에 있었으나, 서양제국주의 침략기였던 1897년 영국의 위협하에 체결된 조약(續議滇緬界務條約附款)에 의거하여 영국령 미안마 영토로 획정되었다. 1948년 미안마가 독립을 쟁취한 뒤에도 코강지역은 계속 미안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1960년과 1961년 중국이 코강지역을 미안마에 ‘양보’하는 내용의 국경협정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9</sup> 코강의 정식 명칭은 미안마 산주(Shan 州, 撣邦) 제1특구로써 윈난성의 전강(鎮康), 창위엔(滄源), 꺽마(耿馬), 룡링현(龍陵縣)과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포함 약 30만 명 중 90%가 한족인 코강족이다. 코강지역은 ‘중국 영토 밖에 있는 중국의

<sup>9</sup>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緬甸聯邦政府關於中緬邊境管理與合作的協定,” <[http://www.lawyee.net/act/act\\_display.asp?rid=307558](http://www.lawyee.net/act/act_display.asp?rid=307558)> (검색일: 2011.3.30); 羅聖榮, 汪愛平, “緬甸果敢衝突及其影響,” p. 22. 1960년대 초 중국은 소련과 이념논쟁을 벌이면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조약을 체결하였다.

행정특구'라고 불릴 만큼 중국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었다.<sup>10</sup>

따라서 친중국계가 장악하고 있었던 코강지역을 미얀마 군사정부가 대내 정치적 목적으로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접 지배하에 병합시키려는 과정에서 미얀마를 탈출한 많은 수의 주민들이 자국 내로 유입되자, 중국은 심각한 위기사태로 인식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강구하여 대응해야만 했다.

### <미얀마 사태 시 중국의 주요 대응조치>

- 미얀마 군사정부-소수민족간 대화 설득, 평화적 해결 요청
- 무장경찰부대 변경지역 순찰·방범활동 강화, 통행로 통제조치 강화
- 중앙지도부 지시하달
- 중앙 지휘본부, 일선지휘부 설치
- 윈난성정부, 섭외돌발사건 협조·응급처치 연석회의 구성·가동
- 중국외교부, 미얀마에 국경지역 안정유지, 미얀마 내 중국인 생명·재산권 보호 요구
- 중국인 사상자 발생에 항의, 사과요구
- 중국유입 미얀마 주민 수용시설에 수용, 구호
- 국경지역에 무장경찰부대 증강, 인민해방군 배치
- 명젠주 공안부장 현지 파견, 변경지역 안정유지, 피난민·무장군인 수용방안 지시
- 무기 휴대 무장세력 무기 압수, 수용
- 천빙더 총참모장 미얀마 파견, 미얀마 군사령관에 중국입장 전달
- 유언비어 차단
- 사태 진정 후 피난민 미얀마 복귀 설득

코강사태가 발생하자 중국은 2005년 8월 대외비 형태로 공포·발효된 국무원 ‘국가섭외돌발사건응급대비방안’(國家涉外突發事件應急預案)에 의거하여 1급 급변사태(特別重大涉外突發事件)로 규정하고 대응하였다. 4단계의 급변사태 중 가장 위급하고 광범위한 대응을 요구하는 급변사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sup>11</sup> 중국은 매뉴얼에 따라 국무원 내에 중앙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사건 발생 현장에도 일선 지휘부를 설치하여 24시간 가동하였다. 윈난성 지방정부 차원의 돌발사태 대응 매뉴얼에 의거하여 윈난성 정부에서도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였다. 8월

<sup>10</sup> 黃康顯, “對果敢局勢可有所作為,” 『大公報』, 2009.9.8.

<sup>11</sup> 500명 이상의 외국의 주민과 피난민이 중국 영내로 진입하는 섭외사건을 중국은 1급 급변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초에는 섬외돌발사건 협조·응급처치 연석회의(聯席會議)를 구성·가동하였으며, 8월 27일 미얀마주민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는 등 코강사태가 악화되자 윈난성 정부는 심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무장경찰부대를 증파하여 경비를 강화함으로써 영내에 미칠 수 있는 파급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중국 당 중앙과 중앙정부는 윈난성 당 위원회와 성정부 그리고 인민해방군 변경관리부대에 지시를 하달하여 변경지역 관리·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변경 통행로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돌발사태가 더욱 악화·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변경지역에 일차적으로 700명의 인민해방군 병력을 긴급 증원하여 변경 통행로 차단·통제조치를 강화하였다.<sup>12</sup> 특히 마약과 무기 등 중국의 사회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금지물품 반입을 엄격하게 차단하고자 하였으며, 변경지역 사태가 쿤밍 등 내륙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언비어가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유의하였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강사태가 악화되어 수많은 코강 주민들이 중국 영내로 유입되자, 중국 중앙정부는 명젠주 공안부장을 윈난성 현지에 파견하여 변경지역의 안정유지 업무와 중국에 유입된 미얀마 주민과 무장세력 수용방안을 지휘·관리하였다. 중국-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안쪽으로 3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지역에 7개의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여 피난민들을 임시 수용하였다.<sup>14</sup> 여름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설치하여 미얀마 주민들에게 거처를 임시로 마련해 주고, 윈난성 정부는 인민폐 1,000만원의 구호비용을 마련하여 식품, 음료, 담요, 약품 등 생활용품을 제공해 주고, 위생 및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피난민 1인당 하루 인민폐 8원의 현금과 쌀 2근을 제공하여 최소한도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용시설 지역의 안전 및 통제조치는 무장경찰이 담당하도록 했으며, 피난민과 관리요원 이외의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관리통제소에서 입주증을 발급받은 피난민만이 지

<sup>12</sup> 중국은 2003년 8월까지 북한과 미얀마와의 국경지역 방어 임무를 무장경찰부대에 맡겨오다가 같은 해 9월 초부터 인민해방군에게 임무를 교체하였다. 현재 북한과 미얀마와의 변경지역 방어 임무는 인민해방군이, 변경 치안유지는 무장경찰이 맡고 있다. “2003年9月16日外交部發言人在記者招待會上答記者問,” <<http://www.fmprc.gov.cn/chn/gxh/tyb/fyrbt/jzhsl/t25769.htm>> (검색일: 2003.9.19).

<sup>13</sup> “中方通報緬甸果敢戰事致邊民涌入中國境內情況,” <<http://www.chinanews.com.cn/gn/news/2009/08-30/1840946.shtml>> (검색일: 2009.8.30). 2010년 8월 6일 윈난성 쿤밍대학교 방문 시 필자가 쿤밍대학교 학생 5명에게 코강사태의 진말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이들 모두 코강사태를 잘 알지 못하였고 중국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는 반응만을 보였다.

<sup>14</sup> 중국정부는 중국에 유입된 미얀마 주민들을 난민으로 규정하지 않고 중국에 일시적으로 유입된 미얀마 변경지역 주민, 즉 ‘邊民’(변민)으로 간주하였다.



정된 수용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sup>15</sup>

중국-미얀마 변경지역에서 발생한 사태 처리과정에서 미얀마 군의 발포로 소수의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중국정부는 미얀마에 엄중한 항의를 전달하고 공식 사과를 받아냈다.<sup>16</sup> 코캉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중국정부는 미얀마 군사정부에게 소수민족과의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을 설득해 왔는데, 중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친중국계 소수민족이 장악하고 있던 코캉에 대해 무장력을 행사한 미얀마 군사정부의 행동은 중국의 국익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sup>17</sup> 중국은 미얀마 내 산족, 카친족, 와족 등 접경지역 소수민족과의 직간접적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미얀마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접경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미얀마 정부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의 하나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영내로 미얀마 피난민들이 유입되는 등 원난지역 불안정을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sup>18</sup>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는 코캉사태에 대해 대외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였다. 코캉사태는 중국 서남부 변경지역 안정과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미얀마 내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중국이 직접 개입하거나 정면 반대하기 어려웠다. 미얀마 내정문제에 개입하게 될 경우 미얀마 군사정부와 중국 간의 관계 및 아세안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sup>19</sup> 따라서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코캉사태는 미얀마 내정에 속하는 문제다 … 중국정부는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일관된 방침을 채택할 것이다 … 미얀마의 화해를 희망한다,” “사태발전을 예의주시하며 … 미얀마 정부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하며, 변경지역의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미얀마 내 중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이 보호되기를 바란다”는 다소 절제된 내용의 외교부 성명문 발표였다.<sup>20</sup> 중국정부는 미얀마 코캉사

<sup>15</sup> “中國不會出兵果敢,” <<http://hi.baidu.com/qlc518/blog/item/036cbbefd8c86d1ffcfa3ce3.html>> (검색일: 2009.9.4).

<sup>16</sup> <<http://china.huangjiu.com/roll/2009-08/561698.html>> (검색일: 2009.8.30).

<sup>17</sup> 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s Myanmar Dilemma,” *Asia Report*, No. 177 (September 14, 2009), p. 26.

<sup>18</sup> *Ibid.*, pp.10-12; Ian Storey, “Emerging Fault Lines in Sino-Burmese Relations: The Kokang Incident,” *China Brief*, Vol. 9, Issue 18 (September 10, 2009).

<sup>19</sup> 미얀마도 이미 아세안 회원국으로 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미얀마 내부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아세안에서 ‘중국위협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우려했을 것이다.

<sup>20</sup> “2009年9月1日外交部發言人姜瑜舉行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chn/gxh/tyb/fyrbt/jzhsl/t581720.htm>> (검색일: 2011.4.10).

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중국 내에 파급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많은 중국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인의 재산과 생명에 위해를 미치는 것을 막는데 일차적 관심을 두었다.

미얀마 정부군이 코강 소수민족 무장세력을 완전 제압·통제한 뒤 중국은 천빙더 중국 군 총참모장을 미얀마에 파견하여 미얀마 군 사령관에게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중국은 코강사태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코강지역 내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미얀마 측과 변경지역 관리와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중국에 유입된 미얀마 주민의 미얀마 귀환과 무장세력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sup>21</sup> 여기에서 중국과 미얀마는 코강지역 무장충돌 사태 발생 이후 중국으로 유입된 미얀마 주민과 무장세력 모두를 원칙적으로 미얀마로 귀환시킨다는데 합의하였으며, 미얀마로 되돌아간 뒤에 이들을 처벌하거나 탄압하지 않도록 미얀마 정부에 대한 설득노력을 전개하였다.

2009년 8월 28일 코강사태가 완전히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자, 중국은 윈난성 지역으로 유입된 미얀마 주민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설득작업을 전개하고 변경지역 질서안정 유지·회복 조치를 취하였다.<sup>22</sup> 중국의 설득으로 8월 31일부터 미얀마 주민들이 변경지역 통행로를 통해 귀환하였으나,<sup>23</sup> 일부는 귀국 후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귀환을 완강하게 거부하기도 했지만 9월 2일까지 임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미얀마 주민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무기를 휴대하고 중국에 진입한 코강 소수민족 무장병력은 적절한 시기에 귀환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수용시설 이외의 여관이나 친지 집에 기거했던 일부 피난민은 귀환을 늦추거나 중국에 잔류하였다.

코강사태가 마무리된 후에도 중국은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들과 접촉하여 코강사태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0월 태국에서 개최된 아세안+1

<sup>21</sup> 중국과 미얀마는 1997년 3월 변경지역 관리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발효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 협정문 22조 2항에 의거하여 중국에 진입한 피난민들을 미얀마로 송환하였다. 중-미얀마 변경지역 관리 협력협정 전문은 <<http://www.yn.gov.cn/yunnan,china/jst.htm?name=>> <<http://www.yn.gov.cn/yunnan,china/77405618595430400/20051122/1024476.html>> (검색일: 2011.4.10)을 참고 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s Myanmar Dilemma,” p. 1

<sup>22</sup> 미얀마 주민 귀환 설득작업은 윈난성 공안청과 인민정부 외사관공실이 담당하였다.

<sup>23</sup> 중국 윈난성과 미얀마 사이에는 모두 8개의 국경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중 난산(南傘)-코강 통행로를 통해 미얀마 피난민들이 미얀마로 귀환했다.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테인 세인 미얀마 총리와 만나 미얀마 안정유지를 바란다는 입장과 함께 민족화해를 강조함으로써 코캉 소수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탄압 저지를 설득하여 중국으로 피난민이 재차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중국에 잔류하고 있었던 일부 피난민들이 미얀마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sup>24</sup>

이처럼 중국이 코캉사태를 심각한 위기사태로 규정하고 대처하였던 이유는 미얀마가 중국에 미치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헤로인의 95%가 미얀마 국경지역을 통해 유입된다는 점에서 미얀마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사태는 중국정부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중국은 미얀마에 광산, 도로, 댐 건설 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초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sup>25</sup>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으로써 중국-미얀마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불안정 사태가 중국의 서부지역 경제발전 및 사회 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만 했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해군이 통제하고 있는 말라카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중동지역에서 인도양을 거쳐 곧바로 원유를 수송하는데 미얀마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sup>26</sup> 2009년 3월 중국은 미얀마의 시트웨(Sittwe)와 키야우크퉁(Kyaukphyu)에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미얀마를 거쳐 쿤밍으로 이어지는 송유관과 가스관 부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미 25억 달러를 투입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하였다.<sup>27</sup> 그런데 이 송유관과 가스관이 코캉 인근지역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역의 소수민족문제로 인해 분쟁이 심화되면 중국의 에너지 도입정책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되며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심각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9년 중국정부가 코캉사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sup>24</sup> Donald M. Seekins, "Myanmar in 2009," *Asian Survey*, Vol. 50, No. 1 (January 2010), pp. 202.

<sup>25</sup> 2008년 9월에만 해도 중국은 타광 타웅 니켈광산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 8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s Myanmar Dilemma," pp. 17-18.

<sup>26</sup> Xuegang Zhang, "China's Energy Corridors in Southeast Asia," *China Brief*, Vol. 8, No. 3 (2008), <[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5Btt\\_news%5D=4693](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5Btt_news%5D=4693)> (검색일: 2010.7.9); Zhang Xuegang, "Southeast Asia and Energy: Gateway to Stability," *China Security*, Vol. 3, No. 2 (2007), pp. 18-35; Marc Lanteigne, "China's Maritime Security and the Malacca Dilemma," *Asian Security*, Vol. 4, No. 2 (2008), pp. 143-161; You Ji, "Dealing with the Malacca Dilemma: China's Effort to Protect Its Energy Supply," *Strategic Analysis*, Vol. 31, No. 3 (2007), pp. 467-489; Pak K. Lee, Gerald Chan, Lai-Ha Chan, "China's Realpolitik Engagement with Myanmar," *China Security*, Vol. 5, No. 1 (Winter 2009), pp. 106-107.

<sup>27</sup> Ian Storey, "Emerging Fault Lines in Sino-Burmese Relations: The Kokang Incident." *China Brief*, Vol. 9, Issue 18 (September 10, 2009).

이유는 코강사태 발생을 전후한 시기에 전개된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 미얀마 접근정책 때문이었다. 오바마가 집권한 후 미국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기존의 압박정책을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고 미얀마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으며,<sup>28</sup> 미얀마 군사정권도 특사조치를 단행하여 일부 민주인사를 석방하고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탄압을 완화함으로써 미국정부의 정책전환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코강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오바마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제임스 웹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동아·태 위원장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탄수웨와 접촉을 가졌으며, 코강사태 발생 이후에는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미얀마를 방문하여 테인 세인 총리 등 미얀마 지도부 뿐만 아니라 아웅산 수지 등 민주인사 및 소수민족 지도자들과도 만났다.<sup>29</sup>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일변도 정책이 유연한 개입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핵심 목적은 미얀마를 비롯한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0</sup>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대 미얀마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코강사태를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1급 급변사태로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강구했던 것이다.

중국이 코강사태를 국가 1급 급변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하였으나, 실제 대처과정에서는 중국 중앙정부보다 윈난성 지방정부가 더 절박한 위기로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코강주민들이 중국으로 피난길에 나서기 이전인 2009년 8월 초부터 윈난성 지방정부 관리는 미얀마 지방군 지휘관에게 코강특구가 속한 산주(Shan 州)에서 불안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코강지역 사태는 윈난성의 경제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이고도 절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sup>28</sup>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09년 2월 아시아지역을 방문하면서 동남아를 중시할 것이며, 미얀마정책 재검토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후 미국은 같은 해 7월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하였고, 11월 미얀마도 회원국으로 가입한 아세안과 아세안+1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테인 세인 미얀마 총리와 만남의 기회를 가졌는데, 이는 43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미얀마 최고지도자 간 회동이였다. Donald M. Seekins, "Myanmar in 2009," *Asian Survey*, Vol. 50, No. 1 (January 2010), pp. 195-197.

<sup>29</sup> 秋千, "美國和緬甸: 一對冥家能走多近," 『世界知識』, 2009年 第23期, pp. 34-35.

<sup>30</sup>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2009년부터 아세안지역포럼(ARF)에 국무장관을 파견하였으며, 아세안회원국 10개 국가와 ASEAN+1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아세안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고자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 여름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얀마 정책을 전환했다는 사실은 위키리크스 전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Helen Warrell and Tim Johnston "Burmese Junta Wary of China's Embrace," *Financial Times*, April 6, 2011; Wayne Bert, "Burma, China and the U.S.A." *Pacific Affairs*, Vol. 77, No. 2 (Summer 2004), p. 280. 劉阿明, "美國對緬甸政策的調整及其前景," 『現代國際關係』, 2010年 第2期, pp. 53-57; 李晨陽, 緬甸問題的新挑戰, 『世界知識』, 2010年 第1期, p. 38.

때문이었다. 윈난성에 유입된 미얀마 주민을 통제하고 구호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물자들도 해당지역에서 동원되었다. 윈난성정부 민정청에서 구호물자를 공급하였고, 공안부 변방관리국의 지시·협조 하에 윈난성 공안청 소속 무장경찰부대가 임시수용시설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성정부 위생청과 쿤밍 의과대학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위생과 질병 통제조치에 투입되었다. 미얀마로의 피난민 송환작업도 윈난성 공안청과 외사판공실 주관아래 진행되었다.

#### IV. 북한 급변사태에 주는 시사점

미얀마와 북한은 다방면에서 중국에게 유사한 의미를 갖는 나라다. 중국의 중요한 전략지역과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고,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중국 서남부지역-인도양, 중국 동북부지역-동해)하는데 중요한 통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 두 나라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혐의로 인하여 오랫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아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생존을 도모해 왔다. 따라서 미얀마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 내부 안정과 발전뿐만 아니라 대미관계에도 직간접적 파급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얀마와 북한에 대해 인식하는 전략 가치와 이익은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처는 미얀마 코강사태에 대한 대응과 유사한 내용도 있을 것이며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향후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급변사태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미얀마 코강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북한 급변사태, 즉 북한에서 정치세력 간 권력투쟁 또는 대규모 주민폭동이 발생하여 내부 불안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과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일부 정치세력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석·전망해 보기로 한다.

코강사태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혼란이 자국에 미칠 수 있는 파급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한·미·일 등 외부세력의 직접 개입을 차단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이 취하게 될 조치들로서는 변경지역 경비를 강화하면서 내정간섭의 소지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사태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경제 및 정치·외교적 조치를 취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에게 북한사태 개입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고 주변국에게 중국위협 인식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독 군사개입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sup>31</sup>

지전략적 요인으로 인하여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악화 방지와 중국으로의 파급 영향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북한 내부 혼란 시 북한주민들 대부분은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sup>32</sup>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부담을 중국이 거의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에서 수십만 명의 탈북자가 중국으로 유입된 사례도 있다. 향후에도 탈북자들 대부분이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일차적으로 북한사태 악화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북한 급변사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처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이 선택한 권력승계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지·지원하는 한편, 북·중 변경지역 경계 및 차단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sup>33</sup> 북한 주민이 중국 영내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나, 일단 중국으로 유입된 탈북 주민과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국경지역에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엄격하게 통합 관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북한 붕괴 촉진 및 중국으로의 더 많은 탈북자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일시적 월경자로 규정할 것이다.

중국은 자국으로 유입될 북한주민을 장기 수용하지 않고 북한 사태가 진정된 다음 조속하게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다. 장기간 수용하게 될 경우 발생할 부담이

<sup>31</sup> 북한사태에 중국이 단독 군사개입에 나설 경우 중국은 한·미 군대와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위협론’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30여 년 동안 대규모 국제구조 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이 한반도에서 효율적으로 대규모 급변사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Drew Thompson, “Watching the Fire Across the River: The Prospect of Chinese Intervention in a North Korea Crisis,” 중앙대학교 국가대전략연구소 개소기념 제1회 동북아미래포럼 발표논문 (2009년 7월 13일).

<sup>32</sup> 중국과 북한 간에는 헤산-창바이, 남양-투먼, 원정리-취엔허, 신의주-단동 등 총 16개의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유입될 경우 대부분이 이들 통행로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sup>33</sup> 2009년 유엔 안보리의 1874호 대북 제재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2010년 이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권력세습 행보에 대해서도 지지입장을 보임으로써 북한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3년 8월 중국이 북·중 국경지역 방어 임무를 공안부대로부터 인민해방군으로 교체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목적 중의 하나는 북한의 불안정이 중국에 파급되지 않도록 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을 것이며 중국내 정치·사회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으로 탈북자들을 유입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탈북자들을 장기간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 군, 국가보위부, 외무성 및 지방정부와 접촉을 갖고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당 대외연락부장과 공안부장 또는 군 총참모장과 같은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파견하여 탈북자 북한 송환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관계 및 중국에 미칠 수 있는 부담 그리고 탈북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주민 대부분을 북한으로 귀환시키고 반정부세력은 중국 내륙지역에 장기 격리·수용할 가능성이 있다.<sup>34</sup>

중국 지도부는 미얀마 코캉사태에 대해 느꼈던 위기감에 비해 북한사태를 훨씬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미얀마 코캉사태 시 중국에 유입된 규모도 37,000여 명에 그쳤지만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중앙 지도부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당 중앙이 아닌 국무원 차원에서 대응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정치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과 무장군인이 중국에 대거 유입될 경우 중국은 국무원 차원을 넘어 당 중앙이 적극 개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무기 실험을 감행한 뒤 후진타오 주석은 7월 15일을 전후 당 중앙 외사영도소조(국가안전영도소조)를 직접 주재하여 대북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북한과의 전통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부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sup>35</sup> 북한사태는 미얀마 사태와 달리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 중앙 외사영도소조 조장을 겸임하고 있는 후진타오와 외사영도소조 부조장 겸 외사관공실 주임 다이빙궈 외에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과 명젠주 공안부장 및 천빙더 중국군 총참모장 등이 직접 북한사태 대처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태 대처과정에서 중국은 ‘국가섭외돌발사건응급대비방안’ 이외에 북·중 간 ‘변경 지역에서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 상호협력 의정서’(1986)와 ‘지린성 변경 관리조례’(1998) 및 ‘변경관리협력협정’(2004) 등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sup>34</sup> 1956년 종파사건 당시 중국으로 피신했던 반김일성 세력들을 산시성 시안 등 중국 내륙지역에 이주시켜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9년 12월 9일 베이징에서 전직 중국외교관과의 대화.

<sup>35</sup> 통일연구원 내부 세미나자료, 2009년 9월 15일. 중국은 2000년부터 국가안전영도소조를 설치·운영해 왔는데, 이는 사실상 기존의 외사영도소조와 동일한 기구로 알려지고 있다. 初曉波, “淺析冷戰後中國的外交危機管理決策,” 『外交評論』, 2010年 第4期, pp. 127-141; 富力·門洪華·孫東方, “中國外交決策機制變遷研究(1949-2009),” 『世界經濟與政治』, 2009年 第11期, p. 53.

<중국의 미얀마 사태와 북한사태 대응 비교>

	미얀마 코캉사태 대응	북한사태 대응
주요 적용 법규	-국가섭외돌발사건응급대비방안 -중·미얀마 변경관리협력협정(1997) -중·미얀마 변방협력의정서(2001) -원난성 섭외돌발사건응급대비방안(2004)	-국가섭외돌발사건응급대비방안 -중·북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 상호협력 의정서(1986) -지린성 변경관리조례(1998) -중·북 변경관리협력협정(2004)* -지린성 섭외돌발사건응급대비방안(2005)
중앙 대책 기구	-국무원 응급관리판공실	-당 중앙 외사영도소조 (국가안전영도소조)
주요 접촉 창구	-외교부 섭외안전사무사 -군 총참모부	-당 중앙 대외연락부 -군 총참모부
군사개입	-군 병력 불과병	-상황에 따라 결정
무장경찰 동원	-동원	-동원
인민해방군 증원	-증원	-증원
피난민 보호	-임시 보호시설 설치·가동	-임시 보호시설 설치·가동
피난민 송환	-주민 송환, 무장세력 일부 귀환	-주민 송환, 무장세력 중국내 수용

\* 2004년 6월 26~29일 중국군 국경경비부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변경관리협력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사태 발생 시 무장경찰이나 인민해방군을 동원할 것인지는 북한사태의 규모와 파급영향력 그리고 한·미 군사력의 개입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의 상황과 달리 북한에서 일시에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상황 또는 북한사태가 중국의 안정과 번영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으로부터 개입 요청이 있을 경우, 중국이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개입 또는 단독개입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sup>36</sup> 또한 이조 말기의 경우와 같이 북한 급변사태가 북한체제 붕괴의 위기로 확산되거나 북한 스스로의 사태진압이 어려워 주변국의 개입이 발생하는 상황 시에도 중국은 자신의 세력범위로 간주하는 북한사태에 적극 개입하여 사태가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고 외부세력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sup>36</sup> 중국은 북한사태에 단독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할 것이다.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제16권 1호 (2010), pp. 47-48.



2009년 여름 미얀마 사태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미국은 미얀마와 관계개선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미얀마 코강사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은 미얀마에 무장경찰이나 인민해방군을 파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국가돌발사건응급대비방안’ 매뉴얼에 따라 대처했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 시 ‘작계 5029’에 의거 미국은 한국과 함께 직접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 유형 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5년까지 한국 군대의 전시 작전권을 미군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이 군 병력을 파견한다면 중국도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부대를 국경지역에 증강 배치하고 북한지역에까지 병력을 전개시킬 가능성이 높다. 2003년 미국이 대 이라크 전쟁 승리를 발표한 뒤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을 수위를 높이자 중국이 중·북 변경지역 주둔 인민해방군을 대폭 증원한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인민해방군을 증원 배치했다.<sup>37</sup> 2005년 2월 미·일이 2+2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대만해협과 한반도사태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한 뒤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북한과 인접한 블라디보스톡과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평화사명’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2009년 8월 미얀마 코강사태 발생 직전에도 지린성의 중·북 접경지역에서 중·러 간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sup>38</sup> 이들 중·러 합동 군사훈련의 주요 목적은 테러 대비에 있지만, 북한사태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10년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 이후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해와 서해에 파견하여 한국과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이 점증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북한사태에 직접 개입하게 될 경우, 중국은 이를 자국의 안보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면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sup>39</sup>

<sup>37</sup> Guo Feixiong, “China’s Role and Objectiv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hina Strategy*, Vol. 3 (July 20, 2004), p. 16.

<sup>38</sup> Stephen Blank, “Peace-Mission 2009: A Military Scenario Beyond Central Asia,” *China Brief*, Volume. 9, Issue 17 (August 20, 2009);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p. 47.

<sup>39</sup>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해에 진입한 뒤

## V. 결론

미얀마 코강사태 시 수만 명에 달하는 미얀마 주민과 무장세력이 일시에 중국 영내로 진입하자, 중국은 이를 1급 돌발사태(급변사태)로 판단하고 해당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대처하였다. 중국으로 유입된 미얀마 피난민들을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단기 수용한 후 미얀마 정부와 협상을 거쳐 사태가 진정된 다음 곧바로 이들을 미얀마로 송환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코강사태를 당 중양이 아닌 국무원 응급관리관공실이 주관하여 처리하였으며, 변경지역에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변경관리부대를 증원 배치하였을 뿐 군대를 미얀마 영내로까지 파병하지는 않았다. 미얀마 코강사태를 1급 섭외 돌발사태(급변사태)로 간주하고 대응하면서도 중국은 미얀마에 무장병력을 파병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현재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대 주변국정책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코강사태 시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태가 중국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되, 중국에 유입된 북한 피난민을 임시 보호시설에 수용한 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에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코강사태의 경우처럼, 북한사태 시 북한과 긴 국경선으로 접하고 있는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sup>40</sup> 상당 부분의 구호자금과 물자를 지방정부가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구호활동을 담당하게 될 인력도 대부분이 지린성과 랴오닝성 출신의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원 그리고 민정청과 위생청 관리들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 동북 지역 출신 조선족들도 통역 업무 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국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유의해야만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대응은 미얀마 코강사태 대응사례와 유사한 점도 있을 것이지만 상이한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와 리비아의 경우와 같이 북한에서 대규모 정치적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일시에 중국으로 유입될 경우 중국은 국무원 차원을 넘어 당 중앙 차원에서

---

중국 내에서는 북한을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李希光, “朝鮮是中國一級核心利益,” <<http://opinion.huanqiu.com/roll/2010-11/1301638.html>> (검색일: 2010.11.30).

<sup>40</sup> 지린성 섭외 돌발사건 응급 대비방안에 대해서는 “吉林省人民政府辦公廳關於加強涉外突發事件應急處置工作的通知(吉政辦發[2005]39號),” <[http://law.baidu.com/pages/chinalawinfo/1684/47/818bcc9c42bad82c33996c711aa35277\\_0.html](http://law.baidu.com/pages/chinalawinfo/1684/47/818bcc9c42bad82c33996c711aa35277_0.html)> (검색일: 2011.3.30) 참고.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 미얀마 사태의 경우와 달리, 미국이 한국군과 협력하여 북한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국제 안보이슈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당 중앙 외사영도소조를 소집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한·미가 군대를 파병할 경우에는 한국전 당시와 같이 중국도 인민해방군 투입을 심각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sup>41</sup>

이처럼 북한 급변사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미·중의 군사개입까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북한 주민은 러시아와 일본으로 탈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과도 사전 협의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중국은 공개적으로 한·미와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며, 한·미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중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미 동맹정책에 대한 중국의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4월 18일 ■ 심사: 6월 2일 ■ 채택: 6월 13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양길현. 『버마 그리고 미얀마』. 서울: 오름, 2009.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條約法律司 編. 『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 中緬篇.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4.

張小明. 『中國周邊安全環境分析』.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3.

朱聽昌. 『中國周邊安全環境與安全戰略』. 北京: 時事出版社, 2002.

<sup>41</sup> 2010년 미국이 한국 등 동북아 동맹국과 합동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한 뒤 『人民日報』가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96.67%에 달하는 중국인들은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응답하고, 한·미가 무력을 행사하면 중국이 ‘抗美援朝’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美國在東北亞頻頻軍演是否針對中國?” <<http://gilt.people.com.cn/bbs/viewthread.php?tid=6687&extra=page%3D1&frombbs=1>> (검색일: 2011.4.17).

## 2. 논문

-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제16권 1호 (2010).
- Bert, Wayne. “Burma, China and the U.S.A.” *Pacific Affairs*. Vol. 77, No. 2, Summer 2004.
- Blank, Stephen. “Peace-Mission 2009: A Military Scenario Beyond Central Asia.” *China Brief*. Volume. 9, Issue 17, August 20, 2009.
- “Burma’s Junta Intensifies Bid for Unification.”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25, 2009.
- “Ceasefire Groups in Shan State Face Renewed Pressure to Surrender.” *Mizzima News*. September 4, 2009.
- Dittmer, Lowell. “Burma Vs. Myanmar: What’s in a Name?” *Asian Survey*. Vol. XLVIII, No. 6, November/December 2008.
- Feixiong, Guo. “China’s Role and Objectiv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hina Strategy*. Vol. 3, July 20, 2004.
- Fuller, Thomas. “Ethnic Groups in Myanmar Hope for Peace, but Gird for Fight.” *The New York Times*. May 11, 2009.
- Hsiao, Russell. “China and Burma to Finalize High-Speed Rail Project.” *China Brief*. Vol. 10, Issue 24, December 3, 2010.
- 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s Myanmar Dilemma.” *Asia Report*. No. 177, September 14, 2009.
- \_\_\_\_\_. “The Myanmar Elections.” *Asia Briefing*. No. 105, May 27, 2010, <<http://www.crisisgroup.org/~media/Files/asia/south-east-asia/burma-myanmar/B105%20The%20Myanmar%20Elections.ashx>> (검색일: 2010.6.3).
- Lam, Willy. “Beijing’s Blueprint for Tackling Mass Incidents and Social Management.” *China Brief*. Vol. 11, Issue 5, March 25, 2011.
- Lanteigne, Marc. “China’s Maritime Security and the Malacca Dilemma,” *Asian Security*. Vol. 4, No. 2, 2008.
- Lee, Pak-Chan, Gerald-Chan, Lai-Ha. “China’s Realpolitik Engagement with Myanmar.” *China Security*. Vol. 5, No. 1, Winter 2009.
- McCartan, Brian. “US Zeroes in on China’s Clout in Myanmar.” <[http://www.atimes.com/atimes/Southeast\\_Asia/KJ24Ae03.html](http://www.atimes.com/atimes/Southeast_Asia/KJ24Ae03.html)> (검색일: 2009.10.26).
- Moxley, Mitch. “China Re-engages Myanmar Ally.” <[http://www.atimes.com/atimes/Southeast\\_Asia/LF08Ae02.html](http://www.atimes.com/atimes/Southeast_Asia/LF08Ae02.html)> (검색일: 2010.6.21).
- Rieffel, Lex. “Looking ahead from Burma’s November 7 Election.” Brookings North east Asia Commentary. Number 43, <[http://www.brookings.edu/papers/2010/1104\\_burma\\_elections\\_rieffel.aspx](http://www.brookings.edu/papers/2010/1104_burma_elections_rieffel.aspx)> (검색일: 2010.11.10).
- Rieffel, Lex. “Is This a Meaningful Milestone for Myanmar/Burma?” <<http://www>.

- brookings.edu/opinions/2011/0405\_myanmar\_burma\_rieffel.aspx> (검색일: 2011. 4.15).
- Seekins, Donald M. “Myanmar in 2009.” *Asian Survey*. Vol. 50, No. 1, January 2010.
- Storey, Ian. “Emerging Fault Lines in Sino-Burmese Relations: The Kokang Incident.” *China Brief*. Vol. 9, Issue 18, September 10, 2009.
- Thompson, Drew. “Border Burdens: China’s Response to the Myanmar Refugee Crisis.” *China Security*. Vol. 5, No. 3, 2009.
- Thompson, Drew. “Watching the Fire Across the River: The Prospect of Chinese Intervention in a North Korea Crisis.” 중앙대학교 국가대전략연구소 개소기념 제1회 동북아미래포럼 발표논문, 2009년 7월 13일.
- Walton, Matthew J. “Ethnicity, Conflict, and History in Burma.” *Asian Survey*. Vol. XLVIII, No. 6, November/December).
- Warrell, Helen·Johnston, Tim. “Burmese Junta Wary of China’s Embrace.” *Financial Times*. April 6, 2011.
- Weitz, Richard. “China’s Growing Clout in the SCO: Peace Mission 2010.” *China Brief*. Vol. 10, Issue 20, October 8, 2010.
- You Ji. “Dealing with the Malacca Dilemma: China’s Effort to Protect Its Energy supply.” *Strategic Analysis*. Vol. 31, No. 3, 2007.
- Zhang, Xuegang. “China’s Energy Corridors in Southeast Asia.” *China Brief*. Vol. 8, Issue. 3, 2008.
- Zhang, Xuegang. “Southeast Asia and Energy: Gateway to Stability.” *China Security*. Vol. 3, No. 2, 2007.
- 王雅平. “對美緬接觸的幾點思考.” 『卡內基中國透視』. 2009年 第10期.
- 周國祥, 李晨陽. “西方炒作緬甸核問題.” 『世界知識』. 2009年 第17期.
- 高煥明. “緬甸朝鮮結盟對抗西方?” 『世界知識』. 2010年 第8期.
- 李晨陽. “緬甸問題的新挑戰.” 『世界知識』. 2010年 第1期.
- 林利民. “世界地緣政治新變局與中國的戰略選擇.” 『現代國際關係』. 2010年 第4期.
- 陳向陽. “妥善應對周邊紊亂政局.” 『瞭望』. 2010年 第15期.
- 孫祥華. “中國與周邊國家關係的新發展.” 『國際問題研究』. 2010年 第3期.
- 初曉波. “淺析冷戰後中國的外交危機管理決策.” 『外交評論』. 2010年 第4期.
- 宮力·門洪華·孫東方. “中國外交決策機制變遷研究 (1949-2009).” 『世界經濟與政治』. 2009年 第11期.
- 劉阿明. “美國對緬甸政策的調整及其前景.” 『現代國際關係』. 2010年 第2期.
- 祝湘輝. “緬甸果敢已經不能平靜.” 『世界知識』. 2009年 第18期.
- 羅聖榮, 汪愛平. “緬甸果敢衝突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2009年 第12期.
- 秋千. “美國和緬甸: 一對冥家能走多近.” 『世界知識』. 2009年 第23期.
- 黃康顯. “對果敢局勢可有所作為.” 『大公報』. 2009.9.8.

### 3. 기타자료

- 李希光, “朝鮮是中國一級核心利益.” <<http://opinion.huanqiu.com/roll/2010-11/1301638.html>> (검색일: 2010.11.30).
- 林錫星, “溫總理訪緬與緬甸大選前的局勢,” <[http://www.zaobao.com/forum/pages2/forum\\_lx100618a.shtml](http://www.zaobao.com/forum/pages2/forum_lx100618a.shtml)> (검색일: 2010.6.19).
- 劉申宁, “中國不應急于介入吉爾吉斯的亂局.” <<http://www.chinaelections.org/NewsInfo.asp?NewsID=179622>> (검색일: 2010.6.15).
- 閻丘露薇, “果敢事件.” <<http://www.my1510.cn/article.php?id=5c66f9fdf32facd8>> (검색일: 2009.8.28).
- “社評：周邊國家應支持緬甸穩定.” <<http://opinion.huanqiu.com/roll/2010-11/1237733.html>> (검색일: 2010.11.10).
- “果敢同盟軍被政府改編.” <<http://news.china.com.cn>> (검색일: 2009.12.6)
- “緬甸大選中國受益.” <<http://global.dwnnews.com/news/2010-10-20/56573161.html>> (검색일: 2010.11.11).
- “緬甸美國改善關係, 果敢危機, 中國應如何面對?” <<http://bbs.rednet.cn/thread-19739323-1-1.html>> (검색일: 2009.8.30).
- “吉林省人民政府辦公廳關於加強涉外突發事件應急處置工作的通知(吉政辦發[2005]39號).” <[http://law.baidu.com/pages/chinalawinfo/1684/47/818bcc9c42bad82c33996c711aa35277\\_0.html](http://law.baidu.com/pages/chinalawinfo/1684/47/818bcc9c42bad82c33996c711aa35277_0.html)> (검색일: 2011.3.30).
- “2009年9月1日外交部發言人姜瑜舉行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chn/gxh/tyb/fyrbt/jzhsl/t581720.htm>> (검색일: 2011.4.10).
- “中方通報緬甸果敢戰事致邊民涌入中國境內情況.” <<http://www.chinanews.com.cn/gn/news/2009/08-30/1840946.shtml>> (검색일: 2009.8.30)
- “中國不會出兵果敢.” <<http://hi.baidu.com/qlc518/blog/item/036cbbefd8c86d1ffcfa3ce3.html>> (검색일: 2009.9.4).
- “2003年9月16日外交部發言人在記者招待會上答記者問.” <<http://www.fmprc.gov.cn/chn/gxh/tyb/fyrbt/jzhsl/t25769.htm>> (검색일: 2003.9.19).
-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緬甸聯邦政府關於中緬邊境管理與合作的協定.” <[http://www.lawyee.net/act/act\\_display.asp?rid=307558](http://www.lawyee.net/act/act_display.asp?rid=307558)> (검색일: 2011.3.30).
- “緬甸新總統呼吁加強民族團結.” <<http://www.huanqiu.com/roll/2011-03/1599759.html>> (검색일: 2011.3.31).

Abstract

## China's Response to the Myanmar Refugee Crisis: *Implications for a North Korea Contingency*

*Sang-Jin Shin*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Myanmar Kokang crisis and to prospect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s contingency. When over 37,000 of Kokang refugees fled into the south-western part of Yunnan province on August 2009, China classified the crisis as level 1 emergency as the most severe and significant incidents which should be manipulated by Beijing. The Yunnan government opened the refugee camps and supplied humanitarian aid to Myanmar refugees, then the refugees were returned to Myanmar just after the condition in Kokang had been improved.

China's preparations and response to the refugee crisis in Yunnan have clear implications for how it might address contingencies on North Korea. Should North Korea collapse in dramatic fashion, a refugee crisis will be one of several challenges that China will face. Should North Korea collapse or over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refugees fled into China at once, it would be a direct threat to Chinese territorial integrity and core national interests. China is expected to do what it can to prevent North Korea collapse, but China might exclude military intervention should U.S. and South Korea not send troops into North Korean territory.

It is certain that China would not tolerate U.S. and/or South Korean troops approaching the Chinese border and such a development might trigger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So, it is highly necessary that U.S.-China and China-South Korea should have held discreet talks on this issue and provide assurances to one another. If true, such an understanding significantly reduces the possibility of miscalculation and the prospect that a sudden crisis in North Korea could expand into a regional conflict.

**Key Words:** China, Myanmar, Kokang incident, North Korea contingency, crisis management, North Korean refugee